

#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돼야”

###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의정정보협 설립 발대식 후 문희상 국회의장에 요청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필수”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 발대식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를 견제하고 감시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강화를 위해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각종 법령과 제도개선,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인사권 독립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정정보협의회의 설립 발대식이 열렸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보장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추진한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은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국회와 지방의회 의정정보 시스템을 활용, 전국 단위의 지방의회 의안, 회의록 등의 자료공유 및 인적 교류를 목표로 2020년까지 243개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기관과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새만금 태양광 사업, 도내 업체 참여 방안 모색해야”

### 도의회 예결특위 2018 회계연도 전북도 결산 심사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1)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11일 정책질문에 이은 12일은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혁신성장산업국 심사에서는 박용근 위원(장수, 무소속)은 도립국악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전북도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2개 시도만 오케스트라가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도는 소리의 고장이고 문화예술 방면에 타시도 보다 월등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도민의 문화예술 충족 욕구를 만족시켜줄 교향악단 창단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승우 위원(군산4,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 도내 태양광관련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 사유가 새만금개발공사의 태양광사업 공모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도내에 2~3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도의 직접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새만금개발공사와 협의해 도내 관련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희수 위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은 일실 양궁장 시설공사 및 운영비 결산결과 2억8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지난해에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각종 대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며 우리도를 찾는 체육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임 위원(비례대표, 민주평화당)은 문화관광체육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결과 불용과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조사에 의한 산출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집행관리로 불용과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만기 위원(고창2,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체전 예산과 관련하여 시군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의 지역 경제유발 효과 분석에 대해 물으며 매년 개최하는 도민체전이 시군을 옮겨서 개최하는 이유는 그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염두해 두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사업이 전액 사고이월된 것을 지적하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고창 선운사에 다양한 체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중식 위원(군산2, 더불어민주당)은 시군대표축제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물으며,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부분별한 축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성과평가에 의한 차등있는 지원으로 시군축제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12일 오후 북측이 보낸 고 이희호 여사의 조화를 실은 트럭이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가고 있다.

## 지방 중기재정계획, 의회 심사권 강화

### 민주 이춘석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각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 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해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입맛에 따라 무모한 대형사업과 중복 투자 사업이 무분별하게 포함되고 추진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면, 각 지역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반영 통로도 확대되고 한해 한해의 예산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 사전 보고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또한 국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유동수, 전현희, 김관영, 임종성, 전혜숙, 김중민, 박지원, 송갑석, 신창현, 박주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김진성 기자

## 아동·가정폭력, 경찰 현장 진입 법적 근거 추진

### 김관영 의원,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사건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시켜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김관영(바른미래당, 군산) 의원은 지난 7일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을 해도 가해 현장 내부로 진입하는 것에 제약이 있으며, 출입 시도 과정에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한계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



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응급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개정안은 경찰 등의 현장 접근에 출입근거를 마련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위급상황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 등의 형사책임은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